

광주시의회, 상임위 추경 의결 뒤집기 논란

예결위 의원들 무성의 질의에 지역구 이익 맞게 상당수 가워질 도시철도 2호선 등 현안 사업 예산市 '거수기 역할' 지적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광주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상당수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예결위 의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 대신, 기초적인 현안 파악에 몰두하는 등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상임위의 의결을 번복하거나 자신의 지역구 이익에 맞게 추경안을 가워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예결위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예산 등 광주시의 현안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광주시의 입맛에 맞게 되살려주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68%나 깎았던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예산도 예결위가 원상복구 했다. 현대차 관련 예산은 노조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지적돼 예산이 삭감됐고,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예산은 '이미 광주시의회가 의결한 사안인데 다시 건립 자체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대폭 삭감됐다.

광주시의회는 대신, 전액 상임위를 통과했던 비엔날레전시관 신축 용역예산과 이용설 시장의 역점사업이기도 한 광주 브랜드 상설공연장 예산은 예결위에서 모두 없애 버렸다.

이번 추경은 광주형일자리·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비엔날레전시관 신축 등 현안 예산들이 몰려 주목받았다. 애초 상임위의 결의에 예결위에서도 대부분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날 오후 5시경부터

무려 7시간 넘도록 이어진 계수조정 끝에 나온 예결위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현대차 투자유치를 위해 광주시가 신청한 연구용역 예산은 모두 7억원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지만 예결위는 이를 모두 되살렸다. 상임위는 "현대차 투자유치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라며 시에서 요구한 예산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예결위는 시의 사업 추진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을 수용했다.

예결위는 또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용역예산의 일부를 삭감한 상임위 결정과는 달리 이를 모두 되살린 뒤 통과시켰다. 상임위는 공론화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 편성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요구예산 3억8000만원 중 1억2000만원만 반영했으나 예결위는 상임위 의결을 무시했다.

반면, 비엔날레전시관 신축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예산 2억2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 예산은 시 요구대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신축사업을 통해 (현재 북구의)비엔날레전시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부 북구지역구 시원의 이의제기가 빚발쳤고, 결국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광주 브랜드 상설공연장 예산 5억7000만원은 상임위에서 7000만원만 깎아 사업 추진을 인정했지만 예결위는 이를 모두 삭감해 버렸다.

이처럼 상임위 심의를 뒤집는 결정이 잇따르자 일부 예결위 의원들이 의결 전 해당 소관 상임위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시의원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예결위가 충분한 검토없이 뒤집어버리면 상임위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일부 예결위 의원들의 '자격 논란'도 일고 있다. 대다수 예결위 의원들은 추경 예산안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따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업 현황을 확인하는 '질문은 질의'에 그쳤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기자 노트

피고인 전두환, 광주법정 출석 피할 수 없다



김형호 사회부 기자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전두환 5·18명예훼손 재판의 소송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와 광주일보가 통화한 것은 지난 21일 오전 11시40분께였다. '이번에도 핑계를 대며 나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재판에 출석하느냐"고 묻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출석할 예정이다. 법에 따라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입장이다."

10여분간의 통화에서 정 변호사는 "출석한다. 좌우간 출석 준비 중이다. 재판 받으러 나오러 가시는 것이다. 법에 따라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다"라는 등 3~4차례 피고인 전두환의 광주법정 출석의사를 전했다.

법정 출석이 '전 전 대통령 뜻이나, 직접 만나 의견교환 하느냐'는 질문에 "너무 당연하다. 제가 소송대리인인데"라는 식으로 마치 자신을 무시하느냐는 뉘앙스까지 풍겼다.

상황 반전의 느낌이 온 때는 지난 26일 오전. 전 씨의 광주법정 출석 여부를 두고 언론의 전망이 엇갈릴 때였다. 전 씨의 측근인 민정기 전 공보비서관은 "지금 만나보러 가고 있다. 경우에 따라 입장문을 내겠다"고 하더니, 오후 3시쯤 "불출석으로 최종결정됐다"고 알려졌다. 앞서 다른 측근이 지난 22일 광주일보에 "사실 전 전 대통령은 5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라고 한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전 씨의 부인 이순자씨는 법정출석 하루 전 내놓은 입장문에서 "고령인데다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다. 광주법원에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피고인 전두환의 광주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당연히 여론은 들끓었다.

피고인 전두환이 불출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첫 재판이 열렸다. 전 씨가 기소된 이유는 그가 편린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 때문이었지만, 판사의 관심은 정작 다른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알츠하이머'가 과연 사실이냐였다.

'전 전 대통령이 치매 투병 중 회고록 발간?'이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여론이 들끓자 민정기 전 비서관이 라디오 방송에 나가 "실은 문제가 될 만한 표현은 내가 썼다"며 후회무시를 자처하고 나섰다.

여기까지가 최근 1주일 전두환 광주법정 출석 번복의 전말이다. 전 씨가 그간의 입장을 바꿔 광주법정 출석의사를 밝혔다가 돌연 불출석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5·18 유행진압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전 씨가 5·18을 애국하는 내용이 담긴 회고록을 냈고, 그에 따른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지법은 지난 28일 피고인 전두환 측에 또다시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 지난 5월 첫 소환장 발부 이후 4번째다. 법원 입장은 확고하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사항이며, 알츠하이머 투병이 사실이라도 출석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 재판은 10월 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전 씨 앞에 놓인 선택지는 2가지다. 소환장을 받고 법정에 제발로 걸어나올 것인지, 아니면 구인장을 받고 광주법정에 끌려갈 것인지. 어떤 경우든 피고인 전두환의 광주법정 출석은 피할 수 없다. /khh@kwangju.co.kr

광주시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 다음달 7일까지 공개 모집

광주시는 30일 "일자리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광주시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을 다음달 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일자리위원회 내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산업 등 5개 분과다. 이들 위원회는 당연기 위원을 포함해 총 1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공모 인원은 분과별로 5명 안팎이다. 광주형 일자리 특위는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공모에서는 10명 안팎의 위원을 모집한다.

앞으로 광주형 일자리와 노사 상생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협의·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문의 062-613-3574.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매케인 상원의원 추도식

미국 보수의 상징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추도식이 29일(현지시간) 고인의 지역구였던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주의회에서 열렸다. 주 방위군 장병들이 성조기에 덮인 고인의 관을 운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다음달부터 부동산 불법 청약 등 시·구 합동 단속

광주시가 지역 부동산 거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9월부터 시·구 합동 특별사법경찰 단속팀을 꾸려 상시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국토교통부 8·27 부동산 대책에서 광주 남구와 광산구가 부동산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분류돼 상시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되고, 이와

관련한 중개업소 불법행위 신고가 급증하자(광주일보 8월 30일자 2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구 합동 특별사법경찰 단속팀은 앞으로 남구와 광산구지역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행위, 실거래가 신고위반(업 다운 계약)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업소 3363

곳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시행해온 상·하반기 합동단속에 그치지 않고 단속 횟수를 늘려 집중 점검한다.

이 밖에도 부동산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등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홍보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년간 부동산중

개업소를 지도·단속해 자격취소, 자격정지, 과태료 부과 등 8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정적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예정"이라며 "적발 시 엄중 처벌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수도요금 휴대전화로 알려준다

'바로 알림톡' 서비스

광주시 30일 "상수도사업본부는 9월부터 수도요금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바로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바로 알림톡' 서비스는 상·하수도 요금을 매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일종의 전자고지 서비스다. 당월 사용량과 납부금액, 체납액, 납부방법, 입금전용계좌까지 한 번에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 알림톡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 문자로도 받아볼 수 있다.

'바로 알림톡' 서비스는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https://water.gwangju.go.kr>) 또는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바로 알림톡' 서비스가 시행되면 종이고지서 제작 예산 절감은 물론 고지서 분실 사례도 줄어들어 시민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제품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c.go.kr>

2016년 9월 20일(화) 조관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턴넷, 방송, 통신은 9.19일(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 태양광 + ESS에 REC 가중치 5.0 부여 -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 설치 대폭 확대